

---

# 김정은 정권의 하이브리드체제 지향 가능성 연구\*

## - 경제관료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

정영교 (중앙일보)

- 
- I. 서론
  - II.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한계
  - III.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 IV. 경제관료와 경제정책 변화의 연관성 도출
  - V. 결론

---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 전망이다. 7·1조치와 화폐개혁, 시장화 현상 등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및 현상들을 분석하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분야 관료들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노선의 도입과 안정성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체제의 장점을 결합해 성장동력으로 삼는 하이브리드식 발전모델을 북한에 적용해 경제 회복과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북한의 하이브리드체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합과 더불어 ‘군’ 중심의 엘리트 구조에서 경제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테크노크라트가 맡은바 영역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하이브리드체제 지향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느냐 보다는 김정은 정권 초기의 정책노선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

\* 본 글은 저자의 “김정은 정권의 하이브리드체제 지향 가능성에 관한연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5 No. 1(2019)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힘.

## I. 서론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와 정책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력의 승계를 크게 위기(Crisis)와 기회(Opportunity)로 보는 대조적인 입장으로 나뉜다. 하지만 권력승계가 전임자와 정책적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후계자가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도입하는 경우 그 성패는 정권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집권 8년차를 지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추진한 정책의 성공은 변화와 혁신을 지지하는 엘리트가 북한지도부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김정은은 집권 초기 파격을 선보이며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2012년 7월 6일 평양의 한 공연장에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Winnie the Pooh) 캐릭터 인형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배경화면에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미녀와 야수’의 한 장면이 펼쳐졌다. 영화 ‘록키’의 주제가와 미국의 1세대 아이돌로 불리는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마이웨이(My Way)도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당시 직책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2시간 가까운 공연을 지켜본 뒤 엄지를 치켜세웠다. 미국 자본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작품이 총출동한 무대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폐쇄적 독재 체제이며 반미 기치를 내걸어 온 북한으로선 파격이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전해졌다.<sup>1)</sup>

1) 『중앙일보』, 2018년 3월 14일.

28살의 젊은 지도자는 퍼스트레이디를 공개 석상에 동반하며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일 것을 예고했다. 또한 공개연설을 통해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건설을 강조 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한 이후 2016년 9월과 2017년 9월 각각 제5·6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2017년 하반기에만 5차례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2017년 11월 29일 ICBM급인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3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핵무력 완성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18년 4월 20일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사실상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포한 것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선택한다는 것은 체제의 명운을 거는 큰 모험일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개방을 택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한 후 7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게 중국은 성공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서로 모순되는 체제를 결합해 그들만의 독특한 발전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다. 서로 다른 체제의 장점만을 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하이브리드식 발전모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갑골문자에서 용은 맹수의 머리와 뱀의 몸을 결합한 모양이었다. 이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용의 모습은 낙타 얼굴, 사슴 뿔, 물고기 비늘 등 아홉 가지 동물의 특징을 결합시킨 형태로 진화했다. 용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인 셈이다. 이질적 요소를 모아 새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중국인의 상상력과 실용성이 잘 드러난 예다. 중국의 부상에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 정신이 깔려 있다.<sup>2)</sup>

북한의 하이브리드체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합과 더불어 엘리트 정책이 ‘군’중심의 사회에서 각 분야의 테크노크라트가 맡은바 영역을 주도하며 정책을 구사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등장했다. 경제 분야에서 김정일이 실패한 7.1조치를 넘어서는 조치로 이어질 것인가. 더 나아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 성공한 하이브리드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경제관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한계

### 1. 실리주의와 내각책임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가장 큰 주목을 끈 부분이 바로 실리주의를 표방한 부분적 경제개혁 조치이다.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은 1998년 헌법의 개정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감독권의 폐지, 특수경제지대의 장려 등 경제운용과 관련한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났다.<sup>3)</sup> 물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실리보장의 원칙이나 새로운 사고방식이 결코 기존의 사회주의 원칙과 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중앙일보』, 2009년 9월 14일.

3)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54~55.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실리보장은 “경제조직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주장과, 실리보장을 위해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과학적 경영전략과 기업전략은 경제의 실리보장을 위한 담보”라는 주장, “각 생산단위가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독자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주어진 조건에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국가와 자기 단위에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 경영을 이윤 극대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였다.<sup>4)</sup>

경제개혁을 실시하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실리주의는 ‘사회주의 원칙의 틀 내에서 경제 실리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한다’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 및 지원유치에 목적을 둔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채택과 같은 경제특구방식의 대외개방조치들, 2005년 12월 ‘중소 관광개발 및 운영규정’을 발표하여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허가 밑에 자체로 관광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외국 기업에 금강개발 투자까지 허용한 조치, 그리고 북·일 수교를 통한 배상금 확보를 위해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직접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하고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송환한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2000~2005년 기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이와 같은 실리주의에 힘입어 해마다 3.5%포인트씩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sup>5)</sup>

4) 『민주조선』, 2005년 11월 26일.(재인용)

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p.317~323.

1998년 공식 권력승계를 마치고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한 경제재건 조치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한 내각책임제의 채택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정무원 부·위원회들을 성(省)으로 개칭하고, 40여 개에 이르던 부서들을 기능적으로 통폐합해 30여 개로 축소했다. 상과 부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들은 신진 기술전문엘리트들로 충원하였다. 내각책임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 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sup>6)</sup>고 주장했다. 이 시기 최소한 당의 경제노선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내각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도 내각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시장화 현상과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회주의 우호가격(friendship price)이라는 이름으로 저렴하게 도입해 온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배급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당국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공장·기업소에 ‘8·3 인민소비품’ 생산과 ‘부업밭’을 허용하면서 10일장 형태인 농민시장의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배급 중단으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등장한 시장에서 여러 차례 거래를 경험하였고 일부는 부를 축적해 ‘돈주’(신흥 부유층)로 성장해 나갔다. 북한 역사상 최악의 경제난이었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시장화 현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

6) 『로동신문』, 2006년 1월 1일.

당시 시장의 유통망이 구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군 등 특권층이 권한을 활용해 시장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하는 시장은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경제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가져왔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국가의 관리영역 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일부 기능을 인정하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조치는 내각의 역할강화와 함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 제고, 개인경작지 확대,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물가와 환율, 급여의 현실화 등 본격적인 개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가의 사회주의적 시책과 공급체계의 축소, 인플레이의 상승과 소득분배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지만,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 증대를 통한 생산성의 증가, 산업시설 확충, 식량증산 등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sup>8)</sup>

구분	2002년 7·1 조치	추가 보완조치	2005년 이후 제한
계획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확대</li> <li>• 중앙계획대상 축소</li> <li>• 세부계획의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지표 축소, 현금지표 확대</li> <li>• 기업 자체의 계획지표 확대</li> </ul>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영지표: 생산량 → 변수입 전환</li> <li>• 변수입의 자체 사용 허용</li> <li>• 독립채산제 전기업으로 확대</li> <li>• 계획외 생산품 30% 시장판매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수입 사용권한 확대: 임금상한선 폐지</li> <li>• 국가납부금 정액제로 전환</li> <li>• 경제단위의 현금보유한도 확대</li> <li>• 국가재산판매 납부금, 부동산이용료 등 조세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수입지표 → 사회순소득 지표 변경</li> <li>• 2012년 12.1 방침</li> </ul>

7)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97~133.

8)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664.

구분	2002년 7·1 조치	추가 보완조치	2005년 이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교류시장 내 원자재거래 허용</li> <li>• 가격결정권한 일부 이양</li> <li>• 유일임금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의 자율적 결정 권한 확대</li> <li>•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거래 허용</li> <li>• 상금, 장려금 지불승인제 폐지</li> <li>• 인력운용 권한 부여</li> </ul>	
농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조관리제 확대: 분조 규모 축소</li> <li>• 이종곡가제 폐지, 배급제 → 구입제 전환</li> <li>• 초과생산물 자율처분 허용</li> <li>• 작물선택권 확대</li> <li>• 세부계획지표권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전담당제 시범 실시: 분조 2-5가구편성</li> <li>• 협동농장에 분조규모 축소권한 부여</li> <li>• 개인경작지 30평에서 400평 확대</li> <li>• 국가납부량 축소</li> <li>• 분조단위 분배권한 확대</li> <li>• 현물분배에서 현금분배로 전환</li> <li>• 6개월 농사(부업발)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수입지표 → 사회순소득 지표 변경</li> <li>• 2005년 10월 식량 판매제 도입</li> <li>• 6.28방침: 포전담당제 강화</li> <li>• 5.30 조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도입</li> </ul>
유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교류시장 개설</li> <li>• 국영상점 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 개설</li> <li>•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거래 허용</li> <li>• 수입물자교류시장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 확대 : 2010년 200여 개 → 2015년 400여 개</li> </ul>
가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가격의 현실화</li> <li>• 변동 국정가격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 등 가격제정방식 다양화</li> </ul>	

### 3. 시장통제와 화폐개혁의 실패

7·1조치는 시장을 국가의 통제 안으로 유도해 관리하려는 의도와 달리 공식(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개인적 경제활동을 확대하면서 서비스 및 자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공장·기업소들도 기존의 생산업종을 변경하거나 ‘돈주’의 투자를 유치해 수익금 일부로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위기의식을 갖게 된 김정일 정권은 2005년 하반기 7·1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김정일이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언급한 이후인 2009년 11월 30일 전격 화폐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종합시장조차 철폐하려고 하였다.<sup>9)</sup>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했으며,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3대 권력 세습을 위한 체제의 통제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폐개혁의 골자는 구체적으로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환 가능한 액수에 제한이 있어 신권으로 교환하지 못하는 구권은 휴지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국이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할 수 없었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민심을 악화시켰다. 화폐개혁 당시 상황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졌다.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만길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 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의 반발에 김정일은 크게 놀랐다.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줄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sup>10)</sup>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은 북한 내에서 시장의 기능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시장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공식경제와 국가의 재정 수입까지도 시장의 토대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합법적 비공식경제에서 비합법적 비공식경제 공간으로 확산했고, 결국 합법적 공식경제 영역까지 침투해 계획경제와 시장이 상호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1)</sup>

9) 통일부,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7), p.135.

10)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p.282.

#### 4. 김정일과 테크노크라트 박봉주

2003년 홍성남의 후임으로 총리에 기용된 박봉주는 북한의 경제관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정일은 실물경제에 밝고 젊으며 추진력 있는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를 기용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과 같은 북한의 명문 대학 출신이 아닌 박봉주는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한 덕천공업대학을 졸업했다. 1962년 평안북도 용천식료공장 지배인으로 시작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1983년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장인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안남도 안주에 위치)에서 책임비서로 10년 간 근무했다.

1993년 노동당 경공업부 부부장에 임명되면서 중앙무대에 진출한 박봉주는 1998년 9월 내각 화학공업상에 기용되었다. 2002년에는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장성택 등과 함께 한국에 방문해 삼성전자와 포항제철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상인들에게 열심히 질문하던 모습을 지켜 본 기자들이 그에게 이유를 묻자 “지금 볼 게 많은데 눈이 두 개뿐이요. 말 좀 걸지 마세요”라고 대답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sup>12)</sup>

김정일은 박봉주의 등용 전후 내각이 주도적으로 국가경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당·정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②당과 군의 경제사업 축소, ③내각의 전문화·연소(年少)화, ④내각 인사권 및 경제관리 재량권의 총리 위임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김정일은 박봉주에게 독대 보고할 기회를 주고 북한의 경제사정에 대한 그의 솔직한 설명을 경청했다. 그의 개혁건의에 대해 ‘대담

11) 통일부,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p.135.

12) 고수석, 『북한을 움직인 30인』, (서울: 늘품플러스, 2018), pp.85~88.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3)</sup> 2004년에는 김정일은 박봉주가 전국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총리 전용 열차를 제공해 편의를 보장해 주었으며 현지지도에 수시로 대동했다.

박봉주는 경제 사업을 적극 장악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김정일의 신임에 부응했지만 2005년 들어 경제개혁의 성과가 부진하자 당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당은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했으며 그의 주변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다. 2006년 6월에는 40일간 ‘직무정지’ 처벌을 받았으며 김정일의 현지지도 수행 그룹에서 배제되면서 점차 신임을 잃게 되었다. 김정일은 2006년 10월 당 간부들에게 “최근 몇 해 동안 경제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잘되지 않았다. (내각)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대하여 단단히 문제를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sup>14)</sup> 추락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2007년 4월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었다.

결과적으로 박봉주는 개혁속도를 둘러싼 당과 내각의 갈등에서 실정과 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당의 견제에 의해서 해임된 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해 선택한 개혁은 제한적이었다. 성과 달성을 위해 개혁을 확대해 추진하던 내각을 방관하다 갑작스런 문제제기를 통해 후퇴시키는 당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이 체제존속과 번영의 기로에서 원칙 없는 고민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서울: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pp.160~215.

14) 『노동신문』, 2006년 10월 31일.

### Ⅲ.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 1. 김정은 정권 초기의 엘리트 구조

김정은 정권은 이전의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2년 4월 로켓발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앞둔 4월 8일 오후 외신기자를 초청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전격 공개했다.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하였다. 과거에는 성공을 주장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 왔으나 당국은 외신기자들에게 곧바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퍼스트레이디인 이설주를 공개하였으며, 최고지도자의 해외순방 일정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폭우와 태풍의 피해상황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일부 증진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김정은이 현지도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당, 정, 군 관료들의 역할 분담도 비교적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선군정치를 펼치던 김정일은 대체로 군부 인사들만 데리고 다녔으나 김정은은 수행인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군 관련 시찰은 장성들과, 경제부분은 당 및 내각의 경제 간부들을 대동하고 있다. 김영남, 최용해 등의 독자행보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박봉주는 경제부문을,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활동은 김영남, 최용해가 김정은의 최측근 참모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며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집권 첫해인 2012년 7월 이영호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치국 명의로 발표했다는 것도 제도와 시스템의 활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정일의 장례, 일련의 사후조치들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 승계 등 모든 것들이 제도와 시스템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파워엘리트 구조의 변화도 함께 모색했다. 이 회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북한 엘리트 구조의 변화는 기존 김정일 중심, 혈연과 학연 그리고 직연으로 구성된 단일 엘리트 구조가 깨지고 엘리트 다원주의(Pluralism)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15)</sup>

첫째, 혁명 1세대를 포함하여 당·정·군의 원로그룹이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이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체제보위에 적극적인 원로들로 채워졌다. 둘째,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내에 당과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보위 엘리트(Regime Security Elite)’들이 폭넓게 포진했다. 50~60대 젊은 실세 엘리트들이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내에 집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이다. 셋째, 선군정치 하에서 성장한 북한의 ‘신군부 엘리트(New Military Elite)’들로서 당의 군사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결하였다.

북한의 엘리트 구조가 이렇게 분화된 것은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최고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충분한 후계준비 없이 권력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 존재하는 단일 엘리트 구조보다 권력 엘리트 간의 역할을 분화시켜 상호 경쟁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엘리트 구조의 분화와 이에 따른 경쟁구도는 체제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체제에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이승열,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전망: 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Vol.10(2012), pp.63~66.

##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시장을 적극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건설 드라이브를 통한 부동산 개발, 과학기술 우대, 생산시설의 현대화, 전력생산 증대 등이다.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하며 품질과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상품의 생산을 이끌고 있다. 또한 대형 상점을 건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만들어 국영부문에서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흡수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체계로 구체화 된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경제관리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초 구성된 상무조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과 실험과정을 거쳐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김정은은 2014년 5월 30일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5·30담화)’을 발표했다.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에는 내각이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개선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15년 상반기까지 인민경제계획법, 재정법, 기업소법 등의 핵심 경제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칙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완료했다.<sup>16)</sup>

16)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2018), pp.293~295.

Ⅰ 표 2 Ⅰ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리체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경영권한 현장에 부여,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도입	
농업분야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상업분야	상업기관 운영 자율권 확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기본 내용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며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상업분야에서는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라는 세 개의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노동 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의 몫을 납부한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다.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 시 현금을 사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sup>17)</sup>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유지했다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기업에 합당한 몫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조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와 기업 간 모순과 갈등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 통일부,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p.137.

### 3.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0년대 초 북한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경제관료인 박봉주, 곽범기, 로두철, 전승훈이 중용되었다. 이들의 역할과 위상은 김정은 시대 엘리트 정책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안을 공표했다. 이 조치의 성패는 향후 김정은 체제의 성공과 개혁·개방 가능성을 예상하는데 핵심 근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7.1조치’를 주도했던 내각의 로두철 부총리, 당의 박봉주 경공업 부장으로 대표되는 테크노크라트의 재등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집권 초 김정은 정권에서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다. 김정일 시기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서 ‘7.1조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당시 로두철은 부총리로서 그를 보좌했던 인물이다.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로두철 부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박봉주는 당 경공업 부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과 위상이 김정은 정권에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4.6담화)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게 “경제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분야에 대한 내각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sup>18)</sup> 이와 관련해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 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가 꾸려졌고, 로두철이 조장을 맡았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실제 로두철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가 북한 경제개혁의 ‘실세’일 것이라는

18) 『연합뉴스』, 2012년 7월 26일.



추정이 힘을 받는다. 2003년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에 부총리로 발탁되었고 2009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까지 겸직하면서 사실상 경제담당 부총리 역할을 맡아 온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서는 북한 내 최고권력 기관으로 평가받는 당 정치국 위원이라는 직함까지 얻었다. 로두철은 2006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조 등 경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그가 김정은이 그리는 ‘경제 청사진’을 주도하는 책임자로서 권한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된다.<sup>19)</sup>

박봉주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차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무위원회는 경제 사업을 총괄하는 내각을 통제·지도하는 기관으로 박봉주에게 경제부문을 총괄하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박봉주는 새로 임명된 김재룡 내각총리(정치국 위원) 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당과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무국, 국무위원회, 내각으로 이어지는 경제라인에 대한 통제와 지도의 역할을 박봉주에게 맡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초기부터 대표적인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인 박봉주와 로두철을 내세워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를 가진 북한체제에서 새로운 경제조치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황에 따라서 박봉주나 로두철도 실패의 책임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경제는 내각 중심으로 간다”고 강조한 것을 뒤집어 살펴보면, ‘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Daily NK』, 2012년 7월 12일.

## IV. 경제관료와 경제정책 변화의 연관성 도출

### 1. 변화의 추동요인: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심 축근으로 등장한 엘리트 세력은 경제 분야의 테크노크라트다. 그들의 움직임은 개혁개방에 앞서 군 중심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내각 중심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는 다음과 같은 변화 추동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전문관료’의 등장이다. 실제로 출범 초기 김정은 정권의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50~60대의 테크노크라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통일부가 제4차 당 대표자회 이후 개편된 내각 등의 주요 인물 106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출신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다음으로 김책공업대, 국제관계대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대학 출신들이 포진했다. 출신지역은 평양과 평안 남도에 집중됐다. 대표적 인물로는 리승호·리철만·김인식 내각부총리,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장, 최광래 국가품질감독위원회장이 손꼽힌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 베이징대와 칭화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등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유학한 유학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1984년생 신세대 권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젊은 ‘전문관료’ 출신이거나, 혁명가문 자제 중심의 중국식 ‘태자당’으로 불리는 ‘봉화조’ 출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신경제 조치의 성공으로 북한 내에서 테크노크라트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북한은 새로운

20) 『세계일보』, 2012년 7월 26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 경제관료의 높아진 위상이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 시대인 2003년 경제관료 출신으로 총리에 오른 박봉주는 내각 주도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최고지도자를 독대하는 기회까지 부여받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국 서열이 중요한데 2003년 당시 그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당과 군의 견제로 2006년부터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는 2007년 4월 까지 ‘식물총리’로 전락한 경험도 있다.

김정은 시대 경제관료의 위상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리를 맡은 최영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경제 기사 자격을 받은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총리에 발탁되고 3개월 후인 2010년 9월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최영림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 후 새롭게 구성된 부총리와 경공업 중심을 하는 경제 개발에 관심을 쏟았으며 권력이 이양하는 시기에 대과 없이 2013년 4월 박봉주에게 총리를 넘겨주었다.

박봉주는 두 번째 총리에 오르기 직전인 2013년 3월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치국 위원이 되었고,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겸한 그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서열 2위이며, 앞선 원자바오 총리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서열 3위였다.<sup>21)</sup> 북한은 박봉주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4월 총리에 임명된 김재룡도

21) 고수석, 『북한을 움직인 30인』, (서울: 늘품), pp.185~199.

정치국 위원에 진입시켜 정치적 권한을 주며 경제성장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용인술(用人術)이다. 김정일 시기에는 경제관료들이 외풍에 너무 쉽게 흔들리곤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화폐개혁의 실패로 숙청된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김영일 총리를 들 수 있다. 총리는 말로만 ‘경제사령탑’이지 추진하던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는 희생양으로 삼곤 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따라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인술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로두철, 김덕훈, 이용남, 고인호, 전광호, 동정호 등 내각의 부총리급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특히 2018년 여름 김정은의 현지도에서 강한 질책을 받은 내각의 건설부문과 함경북도 지역은 책임론이 제기되었지만 관련자인 동정호 부총리와 박훈 건설건설공업상, 이히용 함경북도 도당 위원장도 직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7기 4차 회의에서 6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을 보선하였는데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인 조용원을 제외한 5명(경제담당 부총리 김덕훈·이용남, 도당 위원장 박정남·이히용, 제2경제위원장 조춘룡)을 모두 전문 경제관료가 차지하였다.

## 2. 하이브리드체제 지향 가능성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시키고 총력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며, 모든 부문·단위는 내각의 지휘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의 ‘7·1조치’나 현재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김정은은 경제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이 선택했던 체제의 핵심적 특성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원의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노선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전략노선의 관철을 위해 체제의 핵심적인 특성이 더 약화되더라도 자원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경제적인 혁신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계획의 틀 안에서 시장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부문에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자원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관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의 변화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된다면 새로운 지도자와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느냐 보다는 초기의 정책노선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북한의 하이브리드체제 지향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김정은 체제의 권력승계는 전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와 정책적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는 선군정치에서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던 군부를 대신해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등장한 세력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료의 등용은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당의 영도와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력의 개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경제발전과 자력갱생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4월 15일 문을 연 평양 대동강구역의 대성백화점을 소개했다. 백화점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북한이 자체 브랜드를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수영장과 음식점, 오락실 등의 편의시설까지 갖춘 ‘현대판 백화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경제건설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경제조치가 성공한다면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가 향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함경북도 일대 경제 현상을 시찰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이 안 나온다. 태도가 틀려 먹었다”며 내각과 당의 경제 부문 책임자들에게 질책을 쏟아냈다. 최고 지도자의 강한 질책이 나오면서 경제관료의 책임론을 전망하였으나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의 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해당 분야 책임자인 동정호 부총리, 박훈 건설건설공업상, 이히용 함경북도 도당위원장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분야 테크노크라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가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북한의 정책노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주변국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들의 대내정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정책노선, 하이브리드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제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면, 감시·억압 기제에 의한 통제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드라이브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 참고 문헌

- 고수석, 『북한을 움직인 30인』, 서울: 늘품플러스, 2018.
- 김석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실적과 전망”, 『한반도포커스』, 제41호, 서울: 국동문제연구소, 2017.
- 김인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이슈브리프』, 통권116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상숙,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 결과”,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국립외교원, 2019.
- 이상숙,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대내외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국립외교원, 2014.
-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Vol.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9.
-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승열,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전망: 엘리트의 정책선택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Vol.10,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임수호, “북한 병진노선 폐기의 경제적 의미”, 『이슈브리핑』, 18-13,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서울: 한울, 2016.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 통일부,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7.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2012년 Vol. 5, 서울: KDI, 2012.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서울: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경향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Daily NK』